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대로 정규직화하라

국회 통과 임박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등 노동개악 중단하라

좌파 공동성명
노동개악법
국회 통과
중단하라

3면

베네수엘라 위기

– 왜 발생했고,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 주한 베네수엘라
대리대사 인터뷰

6~7, 8면

고 김용균 씨 소속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이태성 간사 인터뷰
“누더기가 된 공공부문 정규직화,
지금은 싸워야 할 때입니다”

4면

아랍 혁명 8주년
이집트 혁명가가
말하는 현 상황

9면

현장 취재
현대제철
서른 다섯번의 죽음,
그 이유를 묻다

10면

최무영 서울대학교 물리학 교수
인터뷰
“수소차는
친환경 대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11면

오랜 무노조
신화 깬
신도리코
노동자들

12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자동차 산업 위기 원인은 다른 데 있다

연초부터 영국 자동차 산업에서 나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1월에 재규어 랜드로버는 4500명을 정리해고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거의 영국에서이다.

2월에 혼다는 잉글랜드 남부 스윈턴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 바로 3500명이 해고 위협에 처하고,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간접적 영향을 받을 것이다.

닛산도 잉글랜드 북동부 선덜랜드 공장에서 SUV 신차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했다. 닛산은 3월 12일에는 선덜랜드 공장에서 인피니티 모델 두 종의 생산도 중단시켰다.

영국 자동차 생산은 2016년 이래로 줄곧 하락세였다. 신규 투자가 지난 5년 동안 90퍼센트 가까이 줄었다.

브렉시트가 여기에 미친 영향은 얼마나 될까? 유럽 지역을 담당하는 토요타 총괄 부사장 디디에 크로이는 ‘노딜 브렉시트’* 상황은 토요타에 “끔찍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로이의 말은, 1980~1990년대에 영국 자동차 산업이

재건된 것은 주되게는 일본 기업들이 유럽단일시장에 접근하려 영국에 공장을 세운 덕이었던 사실을 반영한다.

‘노딜 브렉시트’ 때문에 [영국과 유럽연합 회원국 사이에 관세 장벽이 생기게 되면, 자동차 산업이 의존하는 영국-유럽 간 다국적 생산 네트워크에 심각한 지장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브렉시트만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 2019년 2월 일본과 유럽연합 사이의 신규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됐다. 이 협정에 따르면, 2027년에는 유럽연합에 수입되는 일본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이 조항은 영국에 기반을 둔 일본 자동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강력히 요구해 협정에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애초에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유럽연합에 수출할 때 부딪힌 관세 장벽을 우회하려 영국에 투자했던 것이다. 조만간 일본 기업들은 유럽 시장에 판매할 자동차를 일본 국내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혼다와 닛산 모두 영국에서 하던 생산을 일본으로 돌리고 있다.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유럽 전체에서 발을 빼고 있다는 뜻이다. 일본 자동차 대기업들은 유럽 시장을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보다 덜 중요하게 본다.

혼다는 터키 공장도 폐쇄하려 한다.

한편, 포드는 유럽에서 일자리 수천개를 삭감하고 있다. 독일에서 일자리 5000개를 삭감했고, 영국에서도 적잖이 줄일 것이다. 이는 브렉시트와는 아무 상관 없는 일이다.

summary

그보다 더 큰 힘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2018년 11월 제너럴모터스는 자사 공장 7곳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그중 네 곳은 미국에 있는 공장들이다. 승용차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사륜구동의 수요는 늘고 있다. 이를 보면서 자동차 기업들은 경유차 중심으로 전환하면 더 까다로워진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폭스바겐이 배기가스 배출량 시험 결과를 조작한 추문은 경유차가 매우 유독한 매연과 미세 입재[미세먼지]를 배출한다는 사실을 널리 드러냈다.

이런 문제들은 하이브리드[휘발유·전기 병용] 자동차나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전환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더구나 그런 전환을 위한 기술적 변화가 방대하고 복잡해서, 기성 자동차 기업들은 신규 주자의 도전에 큰 위협감을 느

낀다. 괴짜인 엘론 머스크의 기업 테슬라가 그런 신규 주자인데, 테슬라는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의 선두 주자다.

자동차 기업들이 받는 이런 압박들은 브렉시트와는 다른 드라마를 낳고 있다. 가장 두드러지는 사례는 카를로스 곤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건이다. 레바논계 브라질인인 곤은 얼마 전까지 ‘르노·닛산·미쓰비시 얼라이언스(연합체)’를 이끈 기업인이다.

이 연합체는 1990년대 말부터 성장했다. 이는 자동차 기업들이 재국유화와 합병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미쓰비시는 곤이 자기 뱃속에 채워 넣은 최신 전리품이었다.[카를로스 곤은 프랑스 정부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르노 자동차를 중심으로 일본의 닛산과 미쓰비시 자동차를 완전히 통합하려고 해 왔다.]

그런데 2018년 11월 곤은 일본에 입국하던 중에 탈세 혐의로 느닷없이 체포됐다. 체포와 거의 동시에 닛산은 곤의 해고를 발표했다. 곤은 현재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곤은 닛산 경영진의 “음모와 배신” 때문에 자신이 부당한 혐의를 뒤집어 썼다고 주장한다. 연합체에 속한 세 기업의 완전한 합병을 도모하는 자신의 계획을 저지하려고 닛산 경영진이 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을 벌였다는 것이다.

곤의 항변에 일말의 진실이 있다면, 그것은 세계화 시대에조차 대기업들이 자국에 단단하게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자동차 기업들이 직면한 경쟁적이고 불확실한 환경 때문에 야기되는 긴장을 드러내기도 한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다. “한계에 이른 공장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브렉시트가 자동차 기업들이 공장 폐쇄 쪽으로 기우는 계기일 수 있지만, 주된 요인은 아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646호 / 번역 김준호

실효성 없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들

이정구

미세먼지가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악화됐지만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실제 효과가 없었다. 3월 초 최악의 미세먼지가 장기간 한반도에 머물면서 사상 처음으로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미세먼지 발생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국가 및 공공차량 사용 제한과 국가 및 관급 건설공사 전면 중단 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나 전체 자동차 대수와 건설공사 규모를 고려하면 그 효과가 거의 없어 보인다. 차량 2부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더라도 그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미지수다. 그것조차 일회성에 그칠 공산이 크다. 더욱이 차량2부제나 경유차 제한은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서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이기도 하다.

인공강우도 효과적인 수단이 아닌 듯하다. 성공율이 낮아데다가 성공해도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매우 낮다. 이 분야에서 기술 발전을 이루었다는 중국에서도 인공강우로 미세먼지를 줄였다는 보고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게다가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도로 살수차나 공기정화기 등도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미세먼지 배출이 가장 많은 곳은 제조업 사업장, 석탄 발전소, 그리고 경유차를 포함한 자동차 등이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대책은 찾기 힘들다.

무엇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막으려면 그러기 전에 즉,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기 전에 이런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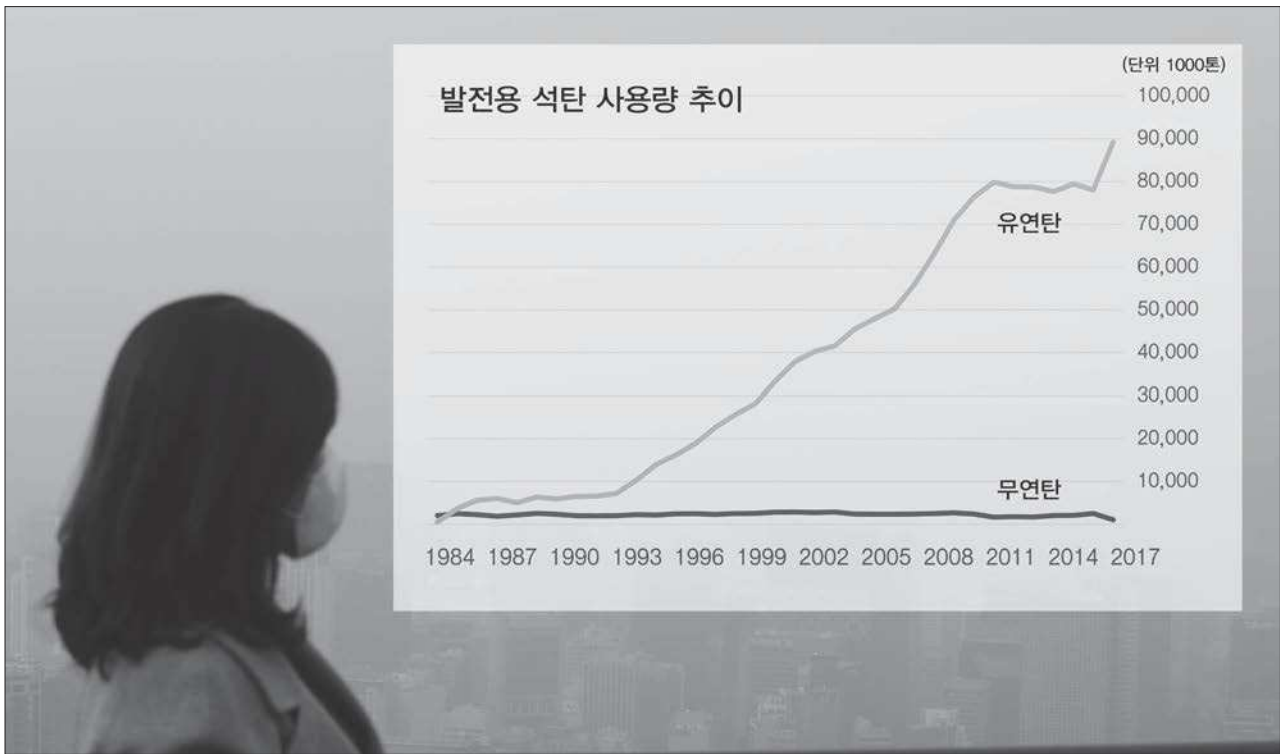
따라서 차량을 생산하는 자동차 기업들이 배기가스를 대폭 줄이는 장치를 달아 판매하도록 해야 한다. 기존에 판매한 차도 무상리콜해 저감장치를 달도록 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자동차 생산자들의 이윤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실시되지 않고 있다.

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제조업 기업을 단속하리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국가적 재난

석탄발전을 줄이는 것도 꼭 필요한 조치다. 환경운동연합은 보령화력 1~2호기 등 30년이 넘는 석탄발전소를 기존 일정보다 앞당겨 폐쇄하고 가동한 지 20년 넘고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석탄발전소도 폐쇄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거의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신규 화력 발전소 7기를 건설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폐쇄될 석탄화력 설비의 세 갑절 가까



미세먼지 줄이겠다면서 석탄화력 늘리는 문재인 정부

이 된다. 문재인 정부가 확정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이 돼도 화력발전은 지금보다 늘어날 것이다. 심지어 발전공기업은 최근 설비 성능을 개선해 30년 넘는 석탄발전소를 10~20년 더 가동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전기차 보급이 미세먼지 대책이 되려면 전기 생산 방식을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시의 미세먼지를 발전소가 있는 지역으로 옮기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한국에서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세먼지를 모두 ‘중국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베이징 등 수도권의 공장들이 산동성으로 이전해 미세먼지가 한반도에 많이 유입된다는 주장도 여전히 과

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오히려 최근 발표되는 연구성과들은 국내 제조업과 석탄발전소 등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가 한국의 수도권에서 생기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미세먼지의 ‘중국탓’은 한국 정부와 기업주들, 석탄발전소 그리고 자동차업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효과를 낼 뿐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대기정체가 특정 지역의 미세먼지를 이동시키지 않고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석탄 발전과 경유차 외에 온실가스 배출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

값싼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장 논리에 도전

하는 강력한 규제가 도입돼야 한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경제 위기 시기에 기업 이윤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쉽게 추진하지 못한다. 제조업 기업들의 이윤과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는 값싼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탈석탄’ 공약이 사실상 백지화된 이유다.

경유차 규제는 자동차 기업의 이윤을 갉아먹을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기업 이윤을 위해 수천만 명의 삶과 건강을 희생시키고 있는 셈이다.

근본에서는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지구 환경이 감당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윤 논리에 강력하게 도전해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를 뛰어넘는 대안이 필요하다.

공동성명

탄력근로제 등 노동개악 국회통과 시도 중단하라!

민주당과 한국당 등 사용자 정당들은 3월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등 노동개악안들을 처리하려 한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국회 본회의 하루 전인 3월 27일 하루 총력투쟁 계획을 내놓았다. 안타깝게도 이는 노동개악이 임박한 상황에 대처하기에 부족하다.

이 글은 지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반대와 대정부 투쟁을 주장한 좌파 단체들이 실질적인 개악 저지 투쟁을 호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이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다가왔다. 3월 18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등 개악 법안 심사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시작됐다.

민주당과 한국당 등 사용자들의 정당들은 이르면 3월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개악안들을 처리하려 한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회 환노위를 방문해, 탄력근로제 법안 심사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환노위 위원장 김학용(자유한국당)은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경사노위, 본색이 드러나다

이런 노동개악을 이끌어 온 것은 자칭 진보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촛불 정부’ 가면을 신속히 벗어던지고 친자본·반노동 본색을 드러냈다. 경제



자본 천국 노동 지옥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 실질적인 개악 저지 투쟁이 필요하다

위기로 다급해진 기업인들에 잘 보여 국정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를 노동개악 추진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양보 강요’를 ‘노동 존중’으로, ‘상생 합의’로 포장하는 것이다. 경사노위의 이런 본색이 최근 여지없이 드러났다.

비정규직, 여성, 청년 계층별 노동위

원 3인이 탄력근로제 개악에 항의해 경사노위 본회의에 불참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라는 포장에 손상을 입자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매너가 없다”며 계층별 노동위원 3인을 비난하고, 의사결정구조를 바꾸겠다고 협박했다. 심지어 경사노위는 공짜 아근과 과로사를 양산할 탄력근로제 개악안을 경사노위 본회의 합의 의결도 없이 국회로 넘겼다.

문재인 정부는 ILO 협약 비준을 빌미로 노동조합법도 개악하려 한다. 최저임금을 줬다 뺏더니, 1987년 운동의 결과물인 최저임금 제도마저 개악하려 한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더니 사실상의 국유기업인 대우조선을 매각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관철은 제조업 일자리 학살을 자행하려 한다. 바닥을 향한 경주를 조장하는 ‘광주형 일자리’도 확대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이고 급속한 우경화 덕분에 반사이익을 얻어 회생의 기회를 얻은 한국당은 한술 더 떠, 정부·여당 안보다 더 개악된 안을 내놓았다.

자본 천국 노동 지옥을 만들려는 데에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한통속이다. 둘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누가 노동자의 고향을 더 잘 찢벌질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본회의 하루 앞둔 하루 총력투쟁으로는 부족하다

현 상황은 지난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가 좌절된 것이 웅장함을 보여 준다. 당시 우리는 ‘경사노위 참여 말고 투쟁하자’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비록 수정안이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주장과 호소는 많은 대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쳐, 경사노위 참여에 대한 지지세를 위축시키는 데 성공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총력으로 저항해 노동개악과 구조조정에 맞서는 것이다. 정치 상황은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기에 결코 불리하지 않다. 노동개악

을 빼고는 권력자들이 분열해 서로 부패를 폭로하며 다투고 있다. 노동운동이 이 분열을 이용해 자신 있게 치고 나가면, 노동개악에 일정 기간 제동을 걸고 전체 정치지형을 왼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지금 다양한 사업장들에서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다 — 대우조선 매각 철회 투쟁,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투쟁, 해고와 노조 탄압에 맞선 투쟁 등등. 이런 투쟁들과의 연대, 또 이런 투쟁들 사이의 연대가 구축돼야 한다.

안타깝게도 민주노총 집행부의 현재 투쟁 계획은 노동개악이 임박한 상황에 대처하기에 많이 부족하다. 3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하루 총력투쟁을 하는 것으로는 개악에 제동을 걸기 부족하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시급히 실질적인 개악저지 투쟁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사용자들과 그 정당들의 개악 릴레이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금 발동을 걸어야 일단 전투들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우리는 개악 저지 투쟁이 모든 노동자들과 모든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선두에 서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노동개악 저지 투쟁에 함께합시다!

2019년 3월 20일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사회변혁노동자당 공공운수현장 활동가회의, 금속활동가모임, 실천하는 공무원현장조직

고용 위기에서 발뺌하는 문재인 정부

고용위기‘론’이 ‘만들어졌다’?

정선영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는 지지부진한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는 정반대로 양극화와 실업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실업자 수는 19년 만에 최대였다. 올해 ‘2월 고용동향’에서는 일자리가 1년 전보다 26만 3000개가 늘었지만, 30대와 40대에서는 24만 3000개가 줄었고 60세 이상에서 39만 7000개가 늘었다. 60세 이상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 것은 정부가 1, 2월에 노인 일자리를 약 25만 개 늘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일자리는 대부분 하루 2~3시간 일하고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받는 저질 일자리들이다. 저질의 공공 일자리는 늘었지만 양질의 일자리들은 줄어든 것이다.

30, 40대의 취업자 숫자는 2015년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최근 들어 더 큰 폭으로 줄고 있다. 제조업 일자리도 2016년부터 줄었고 최근 그 폭이 커져

올해 2월에는 지난해보다 15만 명이 줄어들었다. 이는 경기 악화 상황에서 정부가 밀어붙인 제조업 구조조정 정책이 고용에 악영향을 준 것이다.

일각에서는 30~40대 취업자가 줄어든 것을 두고 30~40대 인구 감소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주장하는 변호론도 나온다. 그러나 “2014년의 경우 생산가능인구는 한 해 전보다 24만 명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취업자 수는 50만 명이나 늘었다. 반면 세계 금융위기가 몰아쳤던 2009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33만 명 증가했지만 취업자 수는 12만 명 감소했다.”(〈한겨레〉2018년 7월 12일)

즉, 고용 상황을 결정하는 것은 절대적인 인구수보다는 이윤율 수준과 이에 따른 경제 성장률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빈껍데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등 우익들이 제대로 시행된 적도 없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등을 공격하며, 오히려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주문하고

있는 것은 정말이지 역겨운 일이다. 이들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노동계급을 공격하는 정책을 추구하다가 불과 2년 전에 탄핵을 당해 정권을 잃었던 자들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고용 상황 악화와 양극화 심화를 낳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겠다고 공약은 빈껍데기만 남았다.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는 국회 연설에서 ‘정규직 임금을 3~5년간 동결’해야 한다며 망발을 했다. 최저임금 인상 억제뿐 아니라 정규직 임금도 동결해 전체 임금을 하향시키려 하는 것이다. 게다가 국회에서는 탄력근로제 개악이 추진되고 있을 뿐 아니라 민주당은 민영화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상반기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최근 국정연설에서 2월 취업자가 늘어난 것만 강조하며 “경제는 건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고용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는 변호론도 나온다. 예를 들어 얼마 전 〈경향

신문〉은 “만들어진 ‘고용위기론’”이라는 칼럼을 실었다.

이 칼럼의 핵심 근거는 고용률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2017년 고용률은 60.8퍼센트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았고, 2018년은 조금 하락해 60.7퍼센트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이전 정부 때보다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봐야 할 것은 지난 20여 년간 고용률이 거의 정체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5배가량 성장했지만, 고용률은 아직도 외환위기 이전 수치(60.9퍼센트)를 회복하지 못했다. 특히 20대 고용률은 1997년 63.9퍼센트에서 지난해 57.9퍼센트로 떨어졌다. 지난 수년간 구직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피부로도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은 “고용 없는 성장”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문제에서 비롯한 것이다. 자본주의에서는 기업들이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고용을 늘리는 것보다 기계와 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더 빨리 늘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마르

크스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라고 지적한 이 과정이 한국에서도 진행돼 왔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적은 노동자로 더 많은 생산을 해 온 것이다.

최근 세계경제와 함께 한국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고용 상황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는 점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최근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온 반도체 수출마저 크게 감소하며 경기가 악화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자동차 산업 위기의 파고가 한국에 닥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대신에 대한 좌파적 비판과 함께 투쟁을 성장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럴 때 문재인 지지율 하락으로부터 우파들만 반사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진보·좌파적 대안을 강화할 수 있다.

용어설명

고용률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고 김용균 씨 소속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이태성 간사 인터뷰

“누더기가 된 공공부문 정규직화, 지금은 싸워야 할 때입니다”

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 씨 장례를 치른 지 1달이 지났지만, 정부 약속과는 달리 정규직 전환 논의와 발전소 안전 강화 대책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지난해 초부터 김용균 씨 사망 항의 운동까지, 발전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을 이끌어 온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아래 사진)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고(故) 김용균 씨 장례 이후 한 달이 넘었습니다. 2주 전에도 위험한 사고가 나는 등 발전소 현장은 변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균 씨 사망사고 진상 규명, 발전소의 노동조건, 안전 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특별노동안전위원회가 구성돼, 곧 공식 출범합니다. 조사할 대상은 9개 석탄·화력 발전소로, 노동·보건·안전 실태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안전TFT도 모든 발전소에 구성해야 합니다. 실제 구성된 곳은 태안발전소 밖에 없습니다. 3월 4일 사고는 사각지대에서 났습니다.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서 1000개 이상의 지적 사항이 나왔는데, 이번엔 사고가 난 부분은 지적이 안 된 곳이었어요.

현장의 인력 충원 없이 2인 1조를 시행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늘어나고 설비사고나 화재사고 등이 배로 증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최소 300명 정도는 즉각 충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발전사는 9월 7일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합니다. 연구용역 뒤에는 정부의 예산 승인까지 거쳐야 하는데, 그러면 너무 늦습니다.

안전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안타깝게도 새로 충원된 20대 청년 노동자들이 일을 하러 왔다가 30~40퍼센트는 그만뒀습니다. 발전소 현장이 실제로 안전한 일터로 개선돼야 하고, 임금도 인상돼야 청년 노동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김용균 동지 투쟁에 대한 당정 협의[2월 5일]에서, 정부는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노동자들은 새로 공공기관을 만들어 직접 고용하기로 하고 노·사·전문가 협의체(이하 노사전협의체)를 재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운전 분야 노사전협의체 재구성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노사전협의체 재구성보다 더 중요한 점은 ‘어떤 공공기관을 만들 것이냐’입니다. 저희는 [새로 만들 공공기관은] 한전의 자회사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발전 5사,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처럼 말이죠.

경상정비 분야 노사전협의체 구성도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상



여전히 지지부진한 정규직 전환,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의 원인인 '위험의 외주화'는 현재 진행형이다.



정비 분야의 민간 개방[민영화]은 정부 정책으로 오래전부터 시행돼 왔고, 정부가 민간업체들을 직접 육성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재공영화에 대한 민간업체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민영화가 실패했다는 점은 속속 밝혀지고 있고, 산업재해도 경상정비 분야가 운전 분야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으려면 재공영화가 필요합니다.

신속한 정규직 전환 논의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책임 있게 점검해야 합니다.

2월 말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민간 위탁 일지러는 정규직화하지 않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전 정비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요?

저희는 민간위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정부가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정규직 전환은 하지 않고, 고용과 처우를 약간 개선하는 정도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가 민간위탁으로 분류한] 발전소 경상정비 분야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었는데, 김용균 동지가 사망한 뒤로 정규직 전환 협의 대상이 됐습니다. 다행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요, 정부가 민간위탁으로 분류한 것에 맞서 저희는 오분류라며 싸워 왔기에 [그나마 정규직 전환 협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민간위탁 [유지] 정책을 보면서, '투쟁이 반드시 필요했구나' 느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분류된 노동자들도 같이 싸워서 정부의 기초를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경상정비 분야는 노사전협의체 구성까지는 이뤄 냈지만, 정규직 전환의 길은 험난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전사 측의 해태로] 1년 넘게 정규직 전환 논의가 질질 끌리면서 현장 노동자들도 지치긴 했습니다. 김용균 동지 사망으로 '발전소가 이렇게 위험하구나' 하는 사회적 공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도 다시 힘을 내게 됐습니다. 다시 잘 싸워서 정규직화해야겠다고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거의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에도 누더기로 진행됐는데, 지금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공공운수노조 내 정규직 전환 쟁점 사업장들에서 진전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측은 자회사 방안만 받으면 다 해결해 준다고 하지만,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하자고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발전에서도 이미 자회사 전환을 한 시설, 청소, 경비 직종과 한전 검침 노동자들의 임금체계는 직무급제예요. 나아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누더기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비정규직 이제 그만' 활동을 통해서 100인 대표단이 대통령 만나서 얘기해보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촛불 혁명으로 정권이 바뀌었다고는 하나, 사회 전반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싸울 수 있는 조직화된 노동자들이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 내 비정규직 단위들을 묶을 조직화가 필요합니다. 정규직화 공동 투쟁을 해서 제2의 촛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노조별로 각각 싸우다 보면, 기제부나 관련 부처들에 맞서 홀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공공운수노조 내 쟁점 사업장들의 공동 투쟁이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더 큰 동력을 만드는 역할은 민주노총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민간위탁으로 분류된 노동자들도 '내가 진짜 싸워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러면 정부 기초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들어가자'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이미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지금은 싸워야 할 때입니다. 계속 부결된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가 시도를 또다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노조 [원]의 민심을 잘 파악했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개악을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 민주노총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합니다.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개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공공부문 등 교대제 작업장에 더 큰 피해를 입힐 거라 봅니다. 이미 발전사에는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탄력근로제가 도입돼 있습니다. 인력 충원을 통해서 인간답게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경우, 실제로 용역 노동자들 중에 최저임금법 위반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산업 범위 확대 개악을 통해 회사는 위법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동 존중'을 외쳤던 문재인 정부가 '노동 천대' 기조로 바뀌고 있구나 싶습니다.

지금 운전 업무는 4조 2교대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 40시간에 맞춰 인력을 충원하라고 요구해 왔어요. 지금도 무조건 대체근무를 서야 하는데, [탄력근로제 확대로 노동시간이] 주 64시간까지 확대되면 쉬는 날 없이 계속 3개월간 대체근무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쉬는 날에 대체근무를 해도 휴일근무수당(야간근무 시 야간수당까지)을 못 받게 됩니다.

통상근무[하루 8시간 근무]를 하는 정비 업무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지금도 발전소 집중 정비 기간엔 주말도 없이 매일 연장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면 [연장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하게 되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발전사 측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컨대, 3월~6월 발전소 집중 정비 기간에 매주 64시간 근무를 시키고 그 뒤에는 일을 대폭 축소시킬 것입니다.

인터뷰 이정원·신정환 / 정리 신정환

계속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

제대로 정규직화하고 처우개선 하라

이정원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은 그간 누더기가 돼서 노동자들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자아냈다. 정부는 정규직화를 하겠다고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하고, 자회사와 저임금 고착화(표준임금모델) 방안을 추진해 정규직화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올해 들어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각해지고 있다. 고 김용균 씨 장례가 한 달이 지났는데도 발전소 정규직 전환 논의가 제대로 시작도 못 하고 있다. 이는 현재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현실을 잘 보여 준다.

그래서 올해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첫째, 무기계약직 또는 자회사로 전환됐지만 열악한 처우가 거의 개선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다. 서울대 시설관리노동자들은 단호한 점거 파업으로 성과를 냈다. 대구 돌봄전담사들도 시간제 일자리를 8시간 전일제로 바꿔 처우를 개선하라며 보름가량 파업을 했다.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직 노동자들도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표준임금모델 도입 중단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의 용역 노동자들은 자회사로 전환됐는데, “전환된 비정규직의 임금은 용역 때보다 삭감되었고, 기존 용역회사와 단체협약으로 보장받던 복리후생비 등은 모두 없어졌다”(공공연대노동조합). 심지어 사측은 자회사를 더 분할하려는 시도까지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환을 제로

둘째, 정규직 전환이 좀처럼 진전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도 여전히 크다.

특히 국립대병원들에서는 파견·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율이 제로다. 최근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실태를 폭로했다. 국립대병원 사용자들은 대표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에서 협상이 진척되지 않는 것을 핑계 삼으며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대병원 사측은 일부 노동자 전환 제외와 자회사 추진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이에 항의해 의료연대본부는 4월 초부터 교육부 앞 농성을 시

작할 예정이다.

사용자들이 자회사 전환을 고수해 이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투쟁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콜센터 노동자들은 자회사 전환 강요에 반대해 파업을 벌이고 있다(관련 온라인 기사 “업무결정과 지시 내리는 캠프가 직접고용 하라!”). 한국전력 고객센터 노동자들도 자회사가 아닌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마사회 등에서도 여전히 사용자들이 자회사 전환을 고집해 진척이 안 되는 상황이다.

셋째, 민간위탁 분야는 더 심각하다. 정부가 3단계 정규직 전환을 포기하고 민간위탁을 유지하는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2단계 정규직 전환 논의 때 ‘용역이 아니라 민간위탁이라 대상이 아니라며 전환 대상에 제외된 노동자들은 이번에도 제외될 위험이 커졌다.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수집 노동자와 콜센터 노동자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무엇보다 정부의 민간위탁 유지 정책은 민간위탁 노동자들을 해고로 내몰고 있다. 해고에 항의해 투쟁한 화성시 청소년 상담사들과 남양주 대체보

육교사들이 대표적이다. 기관측에서는 이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가 정부가 민간위탁 유지 방안을 내놓자 해고해 버렸다. 그래야 정규직 전환 압박을 피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민간위탁 계약 만료를 앞둔 노동자들은 상당한 고용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은 불안감이 더 크다.

탄력근로제 확대

심지어 지자체에서 직접운영하던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돌리려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최근 인천남동구청은 직접 운영해 온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공고를 내서 해당 노동자들이 항의를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화가 차질 없이 진행돼 왔다면 지금껏 해 오던 대로만 하면 된다는 태평한 소리나 하고 있다. 제대로 된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을 바라는 노동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추진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재계약 등 각종 노동 개악들까지 추진돼 노동자들의 조건을 위협하고 있다. 발전비정

규연대회의 이태성 간사는 “탄력근로제 개악은 교대제 사업장을 비롯한 공공부문 사업장에 직격탄”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교대제 사업장들에는 초과근로 수당을 줄이기 위해 탄력근로제가 도입된 곳이 적지 않다. 게다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악으로 비정규직과 전환자 등 상당수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이 억제됐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누더기 정규직화와 각종 노동 개악은 모두 노동자들의 개혁 열망을 짓밟는 일이다.

그간 투쟁에 나섰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이 확대돼야 한다고 제기해 왔다. 정규직화, 최저임금 개악과 표준임금체계 등이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만큼 각자 싸워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지금, 민주노총이 노동개악을 막고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을 확대하고 실질화하는 것이 중요한 때다. 이런 속에서 민주노총 산하 여러 산별연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준비하고 있는 6~7월 공동 투쟁과 공동 파업도 힘있게 조직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장 르포

어느 공공병원 민간위탁 콜센터 노동자의 눈물

양효영

A씨는 정부의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발표가 나오길 손꼽아 기다렸다. A씨는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민간위탁(간접고용) 콜센터 노동자다.

A씨는 올해로 10년차인 베테랑 상담사지만, 복잡한 병원 용어와 업무에 익숙해지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A씨는 상담을 더 잘하기 위해 병원 업무들을 스스로 공부했다.

“콜센터를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만만치 않거든요. 의사마다 스케줄도 다 알아야 하죠. 당일 접수와 담당 과별 업무도 다 숙지해야 해요.”

환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는 데서 보람도 느꼈다.

그러나 콜센터 용역회사는 처우가 너무 열악했다. 용역회사는 늘 당연하다는 듯이 최저임금만 줬다. 식대, 상여금은 꿈도 못 꿔다. 하루 100통이 넘는 전화를 받다 보면 화장실도 제대로 갈 수 없었다.

원래 이러한 콜센터 업무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했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공공병원들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콜센터들을 외주화했다. A씨가 다니는 병원도 마찬가지였다.

문재인이 당선 직후 인천공항에 갔을 때 A씨는 ‘드디어 뭔가 달라지는



병원 고객과 가장 가까워서 일하는 콜센터 노동자들. 정작 병원 직원 대우는 받지 못하고 있다

구나’ 하며 기대했다.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 설문조사도 몇 번 내려왔다. 그때마다 A씨는 성심성의껏 설문조사란을 채웠다.

그러나 1단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콜센터를 민간위탁 형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A씨는 용역과 똑같은데 왜 민간위탁이 제외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도 3단계에 희망을 가져 봤다.

하지만 2월 27일 정부가 내놓은 정규직 전환 3단계(민간위탁 정책 추진 방향)는 기관 자율로 맡겨 두는 것이었다. 사실상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A씨는 “자살 충동까지 느껴질 정

도로 너무나 허무하고 자괴감이 들었[다.]”

“왜 민간위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3단계로 분류를 하고 이제 정부에서 손을 놓고 나 몰라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A씨는 10여 년간 간접고용 노동자로서 차별을 겪었다. 공공병원에서 없어서 안 될 일을 하지만 직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속앓이하는 일이 많았다.

“우리는 병원에서 일하는데 병원 노동자가 아니니 뭣뭣하지 못한 느낌이 들어요.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은 사원증을 짚죠. 저희는 사 먹어야 해요. 밥 먹을 때도 위촉돼서 구내식당에 안 간 지 좀 됐어요.

“명절 때 선물이라고 줘서 보니까 직원들 행사하고 남은 기념품인 거예요.”

심지어 얼굴을 아는 병원 직원들은 오랫동안 근무한 A씨가 당연히 정규직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어느 날은 퇴근하는데 어떤 병원 직원 분이 ‘데이(낮) 근무 끝나고 가시나 봐요’ 하는 거예요. 저를 간호사인 줄 안 거예요. 병원 직원이 아니라고도 못하고 사실 용역회사 소속이라고 설명하자니 길고 그래서 그냥 웃으며 넘겼지만 씁쓸했죠.”

병원은 콜센터가 고객접점 서비스라며 매우 중시한다. 업무 평가도 자주 한다. 그러나 일을 시킬 때만 ‘직원’이다!

희망 고문에서 자포자기로

“용역업체는 중간 수수료 받아가는 거 외에는 우리에게 대해 신경도 안 써요. 병원도 너희는 우리 소속이 아니라며 관심 자체가 없어요. 회식 자리 가면 ‘너희가 우리 직원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그래요. 그 말도 웃겨요. ‘우리는 병원 소속인가. 센터 소속인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죠.”

다른 공공병원 콜센터 노동자들의 처지도 A씨와 크게 다르지 않다. 대부분 민간위탁이나 파견용역직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의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율은 0퍼센트다.

마침내 발표된 정규직 전환 3단계 추진 방향은 마치 A씨의 설움을 비웃기라도 하는 것 같았다. 3단계에 해당하는 민간위탁 콜센터의 경우 정규직 전환이 더욱 어려워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요새 A씨와 동료들은 분노와 좌절감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1~2단계 발표 때까지는 ‘희망 고문’이었다면 3단계 발표 후에는 ‘자포자기’다.

“해고된 KT 노동자들이 자살한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그때는 그 분들이 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3단계 발표를 보고 ‘아, 이런 생각이 들었겠구나’ 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A씨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문재인 정부의 민간위탁 정규직화 포기는 A씨와 같은 여성 콜센터 노동자들의 희망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 것이나 다름없다. 어디선가 A씨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을 콜센터 노동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정부가 또 짓밟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병원 콜센터 노동자들의 절실한 정규직화 바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베네수엘라 위기 — 왜 발생했고,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김준호

이 글은 3월 15일 **노동자연대 공개토론회**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을 약간만 다듬은 것이다.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는 후안 과이도가 이끄는 베네수엘라 야당들의 정권 교체 운동이 5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과이도와 야당들을 적극 지원하며 현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에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정권 교체 운동을 주도하는 것은 베네수엘라 민간 기업, 금융권, 언론사 사장 등 자본가들과 백인 상층 중간계급들이다. 이들은 매우 강력한 자유시장주의자들로, 마두로와 그 전임 대통령인 우고 차베스가 집권한 20년 동안 풀곤 정권 교체를 노려 왔다.

2002년에는 지금 정권 교체 운동을 주도하는 국민의지당(VP)의 뿌리가 되는 정당들과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들은 당시 대통령 차베스를 대통령궁에서 납치했다. 노동자 대중 수십만 명이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지 않았다면 차베스는 외딴 섬에서 유명을 달

리했을 것이다.

2002년 말 베네수엘라 자본가들은 베네수엘라 전국의 생산 시설과 창고를 폐쇄하고 사보타주를 감행하는 등, 경제 권력을 이용한 ‘사장 파업’을 감행했다. 그러나 석유 산업 등에서 노동자들이 생산을 직접 기획·조직하고 물자를 분배해 자본가들의 시도를 좌절시켰다.

그 후로도 베네수엘라 야당들은 차베스가 사망하는 2013년까지 계속 정권 교체를 시도했다. 차베스 사후에는 더 자주, 더 강력한 공격을 감행했다. 이들은 거리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암살 시도와 테러를 벌이고, 수시로 사회 기반 시설을 파괴했다.

이들은 광장적 인종차별적이기도 하다. 이들은 쿠데타를 반대하는 베네수엘라 민민을 ‘이빨 없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는데, 가난한 유색인에 대한 지독한 경멸을 담은 표현이다.

이들이 말하는 민주주의, 자유 운운다. 그들은 당시 대통령 차베스를 대통령궁에서 납치했다. 노동자 대중 수십만 명이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지 않았다면 차베스는 외딴 섬에서 유명을 달



트럼프는 간접 말리며 거리로 나온 베네수엘라 대중

라틴아메리카 진보·좌파 정부들과 미국 제국주의

미국은 20세기 내내 라틴아메리카를 자국의 ‘뒷마당’ 취급해 왔다. 20세기 후반에만도 미국은 라틴아메리카 곳곳에서 친미 쿠데타를 지원하고 기획해 왔다.

그런데 2000년을 전후해 라틴아메리카에서 진보·좌파 정부들이 잇달아 집권했다(이른바 ‘핑크 물결’). 이 정부들은 성격이 조금씩 달랐지만 대체로 미국 제국주의 반대, 신자유주의 반대를 표방했다.

‘핑크 물결’은 전 세계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을 고무했고 그 운동의 영향을 도시 50곳의 인구 10만 명당 파살차 슯 중 세 곳이 베네수엘라 도시였고 그중 하나는 수도 카라카스(3위)였다.

이런 경제적·물리적 위협에 직면해 인구의 약 10퍼센트인 300만여 명이 주변국으로 탈출해 ‘경제 난민’이 됐다. 그런 난민 중 최소 30퍼센트 이상이 노동자라고 집계되기도 했다.

극심한 위기의 와중에, 베네수엘라 자본가들은 사보타주·매점매석·투기·밀수·설비 파괴 등으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나라가 혼돈 상태에 빠지면 대중이 정부를 버릴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다.

차베스도 미국 제국주의에 단호하게 반대했다. 이것이 뚜렷이 표출된 일화는 2006년 유엔 총회였다. 총회 자리에서 차베스는 당시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를 직접 겨냥해 ‘여기 악마가 왔다’고 규탄했고,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 후 1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라틴아메리카에서 ‘핑크 물결’은 퇴조하는 추세다. 곳곳에서 친기업적 정부들이 집권해, 그간 노동자 대중 운동으로 쟁취한 개혁 성과를 되돌리고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계급에 전가하려 한다.

2018년 브라질 대선은 그 중요한 기

점이다. 브라질은 라틴아메리카 최대 대국으로, 사회민주주의 정당 노동자당(PT)이 2016년에 몰락한 후, 강경 우파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당선됐다. 보우소나루의 취임식은 라틴아메리카와 세계 우파들의 잔치 자리가 됐다.

라틴아메리카의 또 다른 주요 국가인 아르헨티나도 2015년에 우파 대통령 마우리시오 마크리가 집권했다. 마크리 정부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신자유주의 공격을 추진하고 있다.

제국주의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 운동을 적극 지원하며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과이도가 대통령을 자처한 지 몇 분 만에 과이도 지지를 선언했고, 베네수엘라를 압박하려고 유엔 안보리 회의를 두 차례나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는 체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부는 ‘핑크 물결’의 가장 두드러지는 사례였고, 그 때문에 미국 지배자들은 공화당·민주당을 불문하고 차베스에 적대적이었다.

차베스도 미국 제국주의에 단호하게 반대했다. 이것이 뚜렷이 표출된 일화는 2006년 유엔 총회였다. 총회 자리에서 차베스는 당시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를 직접 겨냥해 ‘여기 악마가 왔다’고 규탄했고,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 후 1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라틴아메리카에서 ‘핑크 물결’은 퇴조하는 추세다. 곳곳에서 친기업적 정부들이 집권해, 그간 노동자 대중 운동으로 쟁취한 개혁 성과를 되돌리고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계급에 전가하려 한다.

2018년 브라질 대선은 그 중요한 기

점에도 쓴 바 있다. 1970년대 초 미국은 칠레산 구리에 독같은 방식으로 경제 제재를 했다. 당시 칠레 ‘사회주의 대통령’ 살바도르 아옌데 정부는 몇 년 후 라틴아메리카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군부 쿠데타로 몰락했다. 수만 명이 학살당했다.

트럼프 정부는 군사 개입까지 암시하고 있다. 2월 초 백악관 안보보좌관 볼턴은 ‘콜롬비아 국경에 5000명 파병’한다는 메모를 언론에 흘리기도 했고, 3월 14일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미국의 작전에 제약이 된다”는 이유로 베네수엘라 주재 미국 외교 인력을 전원 철수시켰다.

미국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것도 위선이다. 애초부터 그 ‘인도적’ 지원은 베네수엘라 야당들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단으로 기획됐다. 미국은 마두로 정부가 지원을 수용하면 수용하는 대로, 거부하면 거부하는 대로 개입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 트럼프 정부가 베네수엘라인들을 진정으로 ‘인도적’ 목적에서 걱정했다면, 경제 제재를 모두 해제하면 됐을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전 사태가 미국의 사이버 공격 때문이라는 주장이나 오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미국 제국주의가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며 민중의 ‘희생’을 강요한 사례는 세계 곳곳에서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트럼프 정부가 베네수엘라를 압박하는 데에는 이데올로기적 이유도 있다. 베네수엘라의 실패를 ‘사회주의’의 실패로 몰아, 버니 샌더스의 ‘민주사회주의’ 열풍으로 대표되는 좌파 정치 부상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즉, 자본주의 지배 이외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대중의 이상을 꺾고, 운동의 기억을 지우려는 것이다.

미국은 이와 유사한 전략을 약 40년

저마다 공공이가 있는 세계 지배자들

베네수엘라 야당들의 쿠데타 시도와 관련해 세계의 다른 지배자들도 저마다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공공이가 있다. 야당이 운동을 시작한 초기부터 마두로 퇴진을 최후통첩식으로 요구한 유럽의회, ‘리마그룹’ 회의*에까지 참가해 베네수엘라 압박을 거드는 캐나다가 바로 그런 사례다.

중국이 이제까지 미국의 개입에 불편한 기색을 표했던 것도 자국 자본주의의 이해관계 때문이다.

‘핑크 물결’이 라틴아메리카를 휩쓸던 2000년대 초는,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하던 시기이기도 하다. 중국은 십수 년 동안 라틴아메리카에서 원자재를 수입해 서방에 상품을 수출하는 ‘세계의 공장’ 구실을 해 왔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핑크 물결’ 정부들을 발판 삼아 라틴아메리카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려 해 왔다. 중국을 중심으로 생산을 세계적으로 재조직화하려는 장기적 전략의 일환이었다.

미국은 중국의 그런 행보를 상당히 경계해 왔다. 미국이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해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미국 외교 전문가들이 펼쳐 왔던 배경에는 그런 경계심이 있다.

한편, 문제인 정부가 외교부 성명을 두 차례나 발표해 과이도를 지지한 것도 나름의 이해관계 계산의 발로였다.(모욕적이게도, 문제인 정부는 제국주의에 맞선 투쟁을 기리는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미국의 제국주의적 개입을 거둬고 나섰다.)

압박

문제인 정부는 라틴아메리카에서 트럼프 정부의 제국주의적 개입을 지지하는 대신 한반도에서 실익을 얻겠다는 구상인 듯하다. 그러나 그런 행보가 (부도덕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노리는 득도 거두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입증된 바 있다.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거둬며 2004년에 자이툰 부대를 파병했지만, 이후 한반도 정세는 미국의 대북 압박으로 더 악화했다. 오히려 미국이 이라크에서 패배한 것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됐다.(남한 국내 상황으로도, 이라크 파병은 노무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됐다.)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기본 입장은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해야 한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개입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베네수엘라인들의 자결권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해야 한다. 친제국주의·친시장주의 야당 쿠데타의 패배를 바라야 함은 물론이다.

Q. 용어설명

리마그룹 회의

2017년 8월 이르테네리,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등 중남미 국가들과 캐나다가 페루 수도 리마에 모여 마두로 정부 퇴진, 우파 주도 국회 지지 등을 결의한 ‘리마선언’에 초한 회의.

사회주의의 실패?

그러나 동시에,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식 혁명’, ‘21세기 사회주의’의 공과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트럼프와 세계 우파 지배자들이 베네수엘라의 실패와 ‘사회주의’의 실패를 직결시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 객관적 분석이 대안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세 가지 점을 짚을 수 있다.

첫째, 차베스 집권의 배경에는 노동계급 대중의 투쟁이 있었다.

1989년 베네수엘라 노동자 빈민이 카라카스 항쟁*을 벌인 이래, 라틴아메리카 전체에서 신자유주의에 맞선 중요한 운동들이 벌어졌다.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발효를 규탄하며 시작된 멕시코 사파리스타 운동 등이 그런 사례다. 그런 운동들은 1995년 프랑스 공공부문 파업, 1999년 미국 시애틀 세계무역기구(WTO) 회담 무산으로 이어져 세계적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초석을 놓았다.(남한에서 1996~1997년에 벌어진 대중 파업도 그런 국제적 운동 물결의 일부였다.)

그런 운동의 영향을 받아, 차베스는 베네수엘라 자본주의의 여러 측면과 미국 제국주의에 도전할 수 있었다.

차베스 정부가 석유 수출 수익의 일부를 이용해 펼친 개혁(미시온)으로 인구의 4분의 1 정도 되는 국민층의

삶이 유의미하게 개선됐다. 그런 개혁은 노무현·문제인이 추진했던 시장 개혁과는 성격이 완전히 달랐다. 더구나 세계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개혁을 표방한 정부들의 개혁 배신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사례가 특히 영감을 줬다.

그러나 차베스는 자본주의 동학 자체에는 도전하지 않았다. 차베스는 노동계급 대중의 자발성을 위로부터 개혁에 이용했지만, 노동자들이 아래로부터 권력을 장악하고 사회를 계급의 필요에 따라 운영하는 것은 철저히 막았고, 자신도 그런 도전을 하지 않았다.(예컨대 민간 자분을 몰수해 식량·생필품 생산 중심으로 산업을 재편하기 등)

Q. 용어설명

카라카스 항쟁

1989년 당시 베네수엘라 정부가 IMF의 긴축 프로그램을 받아들이면서, 대중교통 요금에 하룻밤에 2배로 인상했다. 이에 항의해 미조직 노동자들과 빈민들이 수도 카라카스 인근에서 자생적 소요를 일으켰다.

항쟁은 약 1주일 동안 지속됐고,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공식 통계로만 287명이 비공식 통계로는 약 1500명이 희생당했다. 그러나 이 항쟁은 베네수엘라와 라틴아메리카에서 급진화 과정을 촉발해, 후에 우고 차베스가 집권하는 데 영향을 줬다.

‘볼리바르식 혁명’ 하에서 베네수엘라 민간 자본가들은 자신의 경제 권력을 포기하지 않아도 됐다. ‘혁명’ 20년 후에도 자본가들이 마두로 정부에 맞서 기세 좋게 쿠데타를 시도할 수 있는 배경이다.

차베스는 산업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노동자들을 가막기도 했다. 베네수엘라 핵심 산업인 석유 산업에서 노동자 관리 요구는 주의 깊게 통제됐다. 2002년 ‘사장 파업’ 당시 차베스 정부와 베네수엘라 민중을 구한 것이 바로 그 노동자들의 자주적 통제였는데도 말이다. 이는 사회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에 배치되는 것이다.

자본주의 권력

둘째, 국가 권력 문제가 있다. 차베스·마두로 집권기에 자본주의 국가는 대폭 강화됐다. 차베스 자신조차 말년에 ‘베네수엘라 국가는 자본주의 국가고 그 안에 비민주성이 만연해 있다’고 인정할 정도였다.

정당 문제도 이와 연결돼 있다. 차베스는 부패와 사보타주가 극심한 국가 기구들을 우회하려고 2006년 베네수엘라통합사회주의당(PSUV)을 창당했다. 쿠바 공산당을 모델로 한 이 당에 600만 명이 입당했다. 그러나 이 당은 아래로부터 노동계급 대중 운동을 고무하기보다는 국가 관료와 출세주의자들의 이해관계를 구현하는 도구 구실을 하게 됐다. 부패가 극심했다.

셋째, 군부도 중요한 쟁점이다. 베네수엘라 군부는 어떤 의미에서도 대중에 민주적 책임을 지지 않는 자본주의 군대고, 자본주의 국가의 중요한 일부다. 마두로 내각의 절반이 현직 군 장성이거나 군부 출신 인사다. 베네수엘라 군부는 경제의 중요한 일부를 직접 경영하고 있다. 군부는 베네수엘라 동부 ‘아르코 미네라’ 지역을 직접 관할 하에 두고, 약 150개 다국적기업들과 합작해 광물을 채굴하고 있다.

미국은 경제 제제로 베네수엘라 군부와 마두로 정부가 분열하기를 바라고 있기도 하다. 베네수엘라 위기가 한계를 넘을 듯하면 군부(또는 그 일부 성원들)가 본연의 기능, 즉 자본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나서 마두로를 제거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종합하면, 오늘날 베네수엘라 위기의 원인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의 부재(혹은 부족)이다. 자본주의 체제와 권력을 그대로 둔 채 (급진적) 개혁을 주의자들의 이해관계를 구현하는 도구 구실을 하게 됐다. 부패가 극심했다.

위기 해결에는 노동자 권력이 요청된다

미국의 압박은 계속 심해지고, 과이도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외세 개입에 뒤통을 열었지만, 이들이 성공하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베네수엘라 노동계급 상당수는 자본가들의 반동적 쿠데타 시도를 극도로 증오한다. 서방 언론에 거의 보도되지 않지만, 쿠데타 반대 측은 여전히 수만 명 이상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시위 참가자들이 모두 마두로 정부를 무비판적으로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 베네수엘라 노동자 대중은, 제국주의와 자본가들이 승리하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피의 보복이 뒤따를 것을 알기 때문에 거리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제국주의와 야당들의 성패 여부만큼이나 이를 어떻게 패티시킬 수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극단적 대립은 극단적 해결책, 즉 혁명적 과제를 제기한다. 베네수엘라의 운동을 몰락시킨 정부도 마찬가지다. 베네수엘라 노동계급 대중은 마두로 정부의 외재 상황을 즉각 중단시키

자베스와 마두로가 가지 않았던 길. ‘21세기 사회주의’의 진정한 산실인 노동자들의 권력 장악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노동계급은 제국주의에 맞선 투쟁을 당면한 계급적 문제를 해결하는 투쟁과 연결해야 하고, 노동자들이 직접 권력을 장악하고 행사함으로써 그릴 수 있다. 이것은 1917년 러시아에서 노동자 소비에트와 볼셰비키가 보여 준 바이기도 하다.

당면한 식량과 생필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첫째 과제다. 베네수엘라 노동계급은, 부패한 국가 관료들과 민간 사장들이 매점매석·밀반출하는 재화를 몰수해 노동계급의 필요에 맞게 스스로 분배해야 한다. 한 해에 전 국민 평균 체중이 11킬로그램씩 줄어드는 기아 상태를, 보름에 한 번 있는 마두로 정부의 배급에 의존해 해결할 수는 없다. 의존적 태도는 노동자 대중의 사기를 꺾기만 할 것이다.

베네수엘라 노동자 대중은 마두로 정부의 외재 상황을 즉각 중단시키

고 모리토리엄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그 재화는 세계 자본가들의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대중의 필요에 쓰여야 한다.

베네수엘라 노동자 권력이 직면할 둘째 과제는 생산 통제다. 베네수엘라 노동계급은 노동자·빈민들의 필요를 우선해 경제 자재를 재편하고 생필품 등 필수적 생산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부패한 정부와 관료들, (‘볼리바르식 혁명’으로 탄생한 자본가들이라는 뜻에서 ‘볼리부르헤스타’라 불리는) 신생 엘리트들은 이에 완전히 실패해 왔다.

심각한 범죄와 소요 사태를 다스려야 한다는 셋째 과제 또한 노동자 권력에서 길을 찾을 수 있다. 무능하고 부패한 군정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스스로 무장한 노동자 민병대로 치안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그런 자체 무장력은 야당들과 콜롬비아계 무장 세력들의 테러·사보타주 시도부터 제국주의의 군사 개입까지 많은 것들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2002년 말에 ‘사장 파업’에 맞서

노동자 권력의 잠재력을 활짝 보여줬던 노동자들의 네트워크, 빈민들의 지역 네트워크는 많은 고난 속에서도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

그 잠재력이 훨씬 강화돼야 한다. 차베스가 제시했던 ‘볼리바르식 혁명’ 수준에서 더 나아가야 하고 대중 민주주의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좌파들이 소수이지만 베네수엘라 기층에 있다.(이들은 스스로 ‘비판적 차비스타’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들이 쿠데타 반대 운동에서 얼마나 많은 지지를 건설해 왔고 지금 얻고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만약 베네수엘라 노동계급과 좌파들이 당면한 요구들에서 출발해 노동자 권력으로까지 운동을 전진시킨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의 새로운 투쟁을 목격하게 될 수 있다.

그런 투쟁을 바라는 남한의 노동자 좌파들은, 미국 제국주의의 베네수엘라 개입에 단호히 반대하고, 베네수엘라 민중의 자결권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제재는 쓰레기를 뒤져야 하는 빈곤층의 삶을 더욱더 위협한다

인터뷰 | 주한 베네수엘라 대리대사 아르투로 힐 뵐또

“미국은 베네수엘라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3월 14일, 본지는 주한베네수엘라대사관 아르투로 힐 뵐또 대리대사(사진)를 인터뷰했다. 두 시간 동안 이어진 인터뷰에서 대리대사는 미국 제국주의의 개입을 비판하고 기성 언론에 의해 왜곡된 베네수엘라 사태의 진실을 풍부하게 전했다. [] 안의 내용은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것이다. 지면에는 분량 제약상 축약본을 실었지만, 구체적 상황과 논쟁적 측면을 두루 다룬 인터뷰 전문을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통역과 영문 녹취에 고생한 한가는 동지에게 감사드린다.

Q 미국의 간섭과 제재 때문에 베네수엘라인들은 어떤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차베스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돼 왔습니다.

몇 년 전 [2013년] 당시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선언하고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미국은 입장을 발표하고 제재를 가할 때마다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말합니다. 베네수엘라 때문에 미국이 비상사태라는 겁니다. 그렇게 베네수엘라인들과 베네수엘라 산업에 제재를 가하는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영석유기업 PDVSA에 대한 것입니다. 미국은 자국 국민들이 베네수엘라 기업인 PDVSA의 수익과 자산을 거래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뿐 아니라 금융을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제재는 베네수엘라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예컨대 금융 제재가 그렇습니다. 미국은 [세계] 금융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의 돈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베네수엘라와 거래한다면 당신들도 제재 대상이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식량·의약품 수입에 종종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베네수엘라인들을 위한 생필품 공급이 큰 어려움에 처하는 거죠. 베네수엘라는 의약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데, 금융 제재 때문에 [상품을 현금·현물 구매해야 하는 처지라] 의약품 수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겁니다.

또, 미국은 몇 주 전 [1월 28일] 제재를 추가해, PDVSA의 미국 자회사인 '시트고'의 300억 달러가 넘는 방대한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시트고는 베네수엘라인들의 것입니다. 시트고가 없으면 베네수엘라인들은 매년 약 110억 달러를 잃게 됩니다.

이런 제재 때문에 베네수엘라인들이 겪는 경제적 문제는 심각합니다. 어떤 보고를 보면, 제재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손실이 400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 문제도 심각합니다. 현재 물가인상률이 워낙 높아서 베네수엘라인들이 몇몇 꼭 필요한 물건을 구



아르투로 힐 뵐또 베네수엘라 대리대사

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정부가 몇몇 조치를 취해 식량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그 때문에 [어려움에서] 약간 회복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제재와 간섭의 파도에 파묻힌 것입니다.

상황은 점점 치명적으로 될 것입니다. 예컨대 베네수엘라의 대미 석유 수출이 끊긴 상황입니다. 미국은 스위스 정부에 연락해 [스위스 은행에 개설된] 베네수엘라 계좌를 모두 동결하라고 요구했고, 다른 나라들에도 베네수엘라와의 거래를 단절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Q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어디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정권 교체 시도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은] 시리아, 리비아, 이라크에서 했던 일을 베네수엘라에서도 하려 합니다. 지금의 경제 제재는 베네수엘라의 안정성을 공격하려는 길 위에 있는 조치입니다. 정권 교체 시도의 첫 단계로 베네수엘라인들이 [마두로] 정부를 저버리게끔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베네수엘라 상황은 조금 불안정합니다. 이번에 베네수엘라에서 사흘 동안 정전이 이어졌고, 그동안 베네수엘라인들에게는 전기와 수도가 없었지만 [서방 언론이 말하는] 대규모 소요 사태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전이 시작되고 고작 몇 분 만에 — 베네수엘라 대통령도 사태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했던 시점이었습니다 —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는 이에 관해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도 [베네수엘라에] 음식도, 약품도 없고, 이제 전기도 없다. 마두로도 없[어야 한다] 하고 트위터에 적기도 했습니다. 정전 사태는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로 가는 미국의 청사진[에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회의장 후

안 과이도를 베네수엘라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과이도를 이용해 미국에 필요한 [베네수엘라의] 자원을 모두 얻어내려 합니다. 미국에 있는 베네수엘라 자산에서 약 5000만 달러를 강탈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전체를 개방하고 규제를 모두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자처하는 과이도는 베네수엘라 내 어떤 기업도, 어떤 국가 기구도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그런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과이도를 베네수엘라 대통령 자리에 앉히려면 폭력을 동원하고 군사 개입을 해야 할 것입니다.

Q 후안 과이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 몇 년 동안 베네수엘라에서 소요 사태를 일으킨 세력들과, 2002년에 차베스에 반대한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후안 과이도는 작고 폭력적인 정당인 국민의지당 대표입니다. 국민의지당은 베네수엘라의 오랜 야당 세력입니다.

과이도는 2007년에 [차베스 정부 반대] 학생운동을 했던 소수 학생들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는 세계 금융 위기가 있었던 때인데, 미국은 이때 베네수엘라 내 소규모 학생운동 집단을 접촉했고, [과이도를 포함한] 그 집단은 [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2014년 '과림바' 소요 때 마두로 정부 반대 운동을 벌이며 다시 등장합니다. 당시 극소수 단체들이 세달 동안 도로를 봉쇄하고 총물을 벌여 122명이 사망했습니다. 국민의지당은 그 소요 사태의 핵심 세력이었습니다.

국민의지당은 또 다른 우파 정당인 정의우선당에 뿌리를 둔 당인데, 정의우선당은 2002년 차베스에 맞선 쿠데타의 주도 세력이었습니다. 두 당 모두 우파 정당입니다.

국민의지당이 운동을 이끌게 된 것은, 이 당이 미국과 미국 대기업들과 연계가 두텁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베네수엘라에서 부유한 가문들입니다. 이들은 폭력적 소요 사태가 벌어지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 주고, 이를 빌미 삼아 미국의 개입을 요청하려 합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 언론의 공작이 많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베네수엘라에서 폭력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일례로.] 지난 4~5주 동안 언론들은 마두로 정부가 콜롬비아·베네수엘라 국경에 있는 다리를 봉쇄하고 '인도적' 물품 반입을 막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다리는 원래 열려 있던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다리 양쪽에 국경 사무소도 없는, 항상 봉쇄돼 있던 다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언론은] 마두로 대통령 탓만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뉴욕 타임스> 보도를 보면, [미국의 지원 물품을 실은] 트럭에 불을 지른 것은 콜롬비아 쪽에 있던 과이도 지지자들이었습니다. 언론이 모두 거짓말했던 거죠.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등 [미국이] 정권 교체를 원했던 나라들 모두에서 그런 [언론] 공작이 있었습니다.

Q 한국의 노동자들과 좌파들에 전할 연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베네수엘라 민중은 자결권과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한국 민중에게도 자결권과 반제국주의는 중요한 가치라고 봅니다. 자결권 쟁취, 제국주의 반대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국 분들도 제국주의가 무엇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도 제국주의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래 전 일이지만, [베네수엘라에도] 스페인 제국주의[에 식민 지배를 당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먼]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제국주의의 문제, 식민주의의 문제라

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베네수엘라가 [어려움] 겪고 있지만, 이후에는 전 세계 모든 집단, 모든 나라, 모든 민중이 [같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전 세계 민중에 베네수엘라를 지지해 주시고 베네수엘라의 진실을 알아 달라고 호소 드립니다. 현재 [서방] 언론은 매우 편향돼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다룬] 뉴스에서는 온통 거짓말뿐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실상을 봐 주시고, 베네수엘라 정부에 관해 [진실을 보도하는] 대안 언론을 봐 주십시오.

저희 베네수엘라가 한국의 사회 운동, 자본주의에 맞선 훌륭한 투쟁들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베네수엘라에도 한국 노동자들이 교훈을 얻을 만한 투쟁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베네수엘라에 연대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 건설을 모색하는 사회 운동에 연대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가끔은 '아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사악한 것일 뿐이야'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안정적으로 이윤을 얻기 위해 '생산 생산 생산', '성장 성장 성장'을 주문처럼 되뇌며 미친 전쟁에 나선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전 세계 민중이 베네수엘라의 자결권을 지지해 주기를 호소합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네수엘라에 가해진 제재가 모두 철회되어야 합니다.

인터뷰·정리 김준호 / 통역·녹취 한가는

함께 참가합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제재·간섭 규탄 긴급 기자회견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제재·간섭 중단하라!"

일시: 3월 22일(금) 오전 11시

장소: 미대사관 앞(세종대왕상 앞)

주최: 민중공동행동,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노동자연대 등

인터뷰 | 이집트 혁명가가 말하는

‘아랍의 봄’ 8년, 이집트의 현실

2011년의 ‘아랍의 봄’ 혁명이 일어난 지 8년이 지난 지금, 이집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들어 보기 위해 이집트 사회주의 활동가를 만났다. **타헤르 무크타르**(사진)는 이집트의 혁명적 단체 ‘혁명적사회주의자(RS)’ 회원이자 2011년 ‘아랍의 봄’ 혁명 당시 의사노조 파업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프랑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유럽에서 이집트 정부에 반대하는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활동가 앤 알렉산더와 ‘노동자연대’ 활동가이자 아랍어 통번역 전공자인 박이량이 인터뷰했다.

Q 먼저 현재 이집트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말해 줄 수 있나요? 2011년 혁명 이후 8년이 지난 현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1월 25일은 혁명 8주년이었습니다. 당시 혁명은 여러 측면에서 희망과 변화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고, 압델 파타 엘 시시가 대통령에 당선했습니다. 쿠데타 이후 상황은 큰 혼란이었습니다. 기존의 정치 활동 영역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정권은 혁명에 참여했던 청년들을 보고 교훈을 얻었습니다. 즉, 무바라크 정권이 2011년 혁명의 청년들에게 정치 활동에 참여할 여지를 줬기 때문에 몰락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활동의 숨통을 아예 조여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권 상황이 완전히 비극적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매년 수백 명이 납치·실종되고 있습니다. 고문이 대놓고 광범위하게 체계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체포됐을 때, 저를 포함해 함께 수감된 30명 중 28명이 구타와 전기 고문 등 체계적 고문 등을 겪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고문을 통해서 사건을 날조한 후 활동가들을 장기 수감하거나 사형을 선고합니다. 2017년 12월 26일과 2018년 3월 사이에만 30명이 군사 법정을 통해 처형당했습니다. 그 뒤 국제적 압력이 어느 정도 가해져서 사형 집행이 연기됐습니다.

작년 봄에 시행된 대선에서는 엘시시만이 입후보했습니다. 입후보하려던 다른 후보들은 엘시시 지지 선언을 하고 사퇴하거나 체포돼 구금되는 등 방해와 압력 탓에 아예 출마하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현재 이집트에서는 정치 활동 공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고, 의회는 엘시시가 장기 집권할 수 있도록 헌법까지 개정하고 있습니다.

Q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은 누구인가요?

외부의 지원은 이집트 정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애초에 이집트 정권은 유럽과 서방의 지원이 없었다면 쿠데타 감행을 비롯해 시위대를 학살할 힘과 용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변국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이집트 정권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쿠데타를 위해 군부에게 막대한 금액의 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사이에는 지역적 차원에서 외교적 협력을 비롯해 정보기관들 간의 교류도 긴밀합니다. 물론 다른 한편에는 현재 이집트 정권에 전폭적 지지를 보내는 이스라엘도 있습니다.



Q 이집트 사회 내부에서 엘시시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은 누가 있나요?

일단 정권은 이집트 국가 기구 바깥에 기밀 곳이 없습니다. 자본가들이 논리적으로는 정권을 지지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겠지만, 군부가 이집트 경제에 끼치는 막대한 영향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집계된 바 없지만 대략 경제의 30~40퍼센트 정도가 군부 소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집트 경제는 군부에 의해 운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부가 시장 경쟁에 뛰어들면 이길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부는 강제 징집된 군인들을 동원해서 무료 노동을 시키거나 자원을 마음대로 활용하고,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민간 사업자보다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군부는 최근 미디어에도 막대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이 직접 방송국을 운영하기까지 합니다. 군부는 정치뿐 아니라, 드라마·영화·가요 같은 미디어까지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Q 정권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 특별히 언급하실 만한 점이 있나요? 예를 들어 긴축 정책이나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등은 성과를 거두고 있나요?

정권은 경제 정책에서 엄청난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엘시시는 집권 후 ‘제2 수에즈 운하’ 같은 계획을 성공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들은 이집트의 보유 외화를 많이 잡아먹었는데, 기대한 만큼의 경제적 효과는 없었습니다. 최근 한 행사에서 엘시시는 “타당성 검토는 필요하지 않다”고 한 걸 보면 운하 완공 자체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제2 수에즈 운하로 문제가 발생하자 정권은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차관을 들어왔습니다. 차관을 들여오는 조건으로 정권은 온갖 긴축 정책을 펼치면서 국민에게 고통을 전가했습니다. 연료 지원금이 삭감되고 의약품 값은 올랐으며 가스비를 비롯해 모든 상품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6개월마다 비슷한 상황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현 경제 상황은 매우 안 좋습니다. 카이로 지하철 요금을 보면 알 수 있을 텐데요, 2016년에 비해 고작 2년



“도살자 엘시시를 저지하자” 2015년 11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이집트 대통령 엘시시 방문 반대 시위

동안 거리에 따라서 최대 7배 올랐습니다.

이런 현상이 모든 일상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는 엄청나고 이집트인들이 감내하는 현실적인 고통입니다. 매주 한 두 명이 경제 위기로 인한 고통 때문에 지하철역에서 자살을 합니다. 이런 동영상도 정말 많습니다. 바로 어제도 온라인에서 많이 공유된 자살 영상을 봤습니다. 이제 지하철역에는 자살하려면 제발 다른 곳에 가서 하라는 안내문까지 붙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 철로에 뛰어들어 자살하면 그 유족이 정부에 배상토록 하는 계획이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이는 이집트 민중이 절박한 상황이라는 증거입니다.

Q 그렇다면 물가 인상 등에 맞선 저항이 있었나요?

우선 정권은 정치적 반대파를 완전히 억누르고 나서 이와 같은 경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정치적 시위는 이집트가 두 섬, 티란과 사나피르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양도하는 것에 항의해 벌어졌습니다. 엄청난 탄압이 뒤따랐고 활동가 수백 명이 투옥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권은 곧바로 긴축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 두 섬을 양도한 사건에 분노가 광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은 자신들이 애국자라고 선전해 왔는데, 이와 정면으로 반대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4월에 있었던 지하철 요금 인상 반대 시위는 여러 지하철역에서 동시다발로 벌어졌습니다. 정권은 이 운동을 대대적으로 탄압했고 반기를 들 것으로 예측되는 정치인이나 활동가들을 잡아들였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노동운동가이자 노동 변호사인 하이탐 모함메딘은 요금 인상



2015년 6월 한국에서 열린 ‘이집트 정치 탄압 중단’을 위한 국제 행동

반대 시위가 벌어지기도 전에 체포됐습니다. 실제로 참여하지도 않은 시위를 선동했다는 혐의로 잡혀갔습니다. 여러 시위가 크게 열린 후에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Q 정권에게 약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제 생각에 정권은 두 가지 근본적 약점이 있습니다. 우선 정치적 기반이 없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주변국과 해외의 지원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들은 민중 반란이 벌어져 자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깊게 얽혀 있습니다.

둘째, 이집트 정권이 서방 세력들과 일시적 동맹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동맹은 오직 서방 기업들에게 막대한 돈을 썼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관계가 단기적이라는 점입니다. 자국 내 동맹 세력이 부재한 엘시시에게, 자신의 정권과의 동맹에 반대하는 운동이 존재하는 서방 국가는 장기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동맹이 한 순간에 등을 돌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Q 해외의 활동가들과 노동조합이 이집트의 활동가들과의 연대를 위해 무

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집트 정권은 무기를 구입해 주는 대가로 지지를 보내고 있는 해외 정부들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사람들은 자국 정부가 이집트의 범죄 정권과 동맹을 맺는 것에 반대해 조직하고 변화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뤄야 할 문제는 탄압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 거래입니다. 이를 반대 운동의 초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명을 받고, 시위를 조직하고, 의회에 압박을 가해서 ‘왜 우리 정부가 칠레의 피노체트와 하등 다를 바 없는 독재자를 지지하고 있는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집트 외부에 있는 활동가들이 초점을 맞춰야 할 둘째 문제는 이집트 내부의 활동가들과 노동조합을 위한 연대를 조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감돼 있든, 여행 금지를 당했든, 해고를 당했든 간에 탄압을 받고 있는 노동조합 활동가나 정치 활동가나 인권 활동가들의 문제를 알릴 수 있습니다. 이집트 정권은 고립을 이용하기 때문에 연대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국 내 이집트 활동가들과 연락하며 이집트에서 벌어지는 탄압에 맞선 캠페인을 함께 조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들입니다.

현장 취재

현대제철 서른다섯 번의 죽음, 그 이유를 묻다

김승주

지난 12년 사이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만 35번의 죽음이 있었다. 기계에 끼이고, 가스에 질식하고, 철재에 깔리고, 추락하고, 감전되고, 열기 속에 과로하고, 암에 걸렸다.

한 달 전인 2월 20일에도 컨베이어 벨트 협착 사고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언론의 반짝 관심조차 별로 받지 못했다.

현대제철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이 무엇인지 심층 취재하려고 당진으로 향했다.

사망한 노동자는 외주업체 소속이었다. 컨베이어 벨트 아랫면에 있는 커다란 도르래(폴리)에서 벨트를 멈춘 채 작업하고 있었다. 2미터 남짓한 간격을 두고 바로 옆에는 벨트 네 개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노동자는 부품을 가지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내 작업 중이던 벨트가 아닌 바로 옆 벨트 폴리에 협착돼 쓰러진 채 발견됐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사무실을 방문해 사고 현장에 관해 자세한 얘기를 들어 봤다.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은 한 정규직 노동자가 함께했다.

모든 게 돈이니까

홍승완 지회장은 공장 설계부터 노동자들의 안전이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만약을 대비하는 안전 투자는 회사 처지에서 최대한 아껴야 할 ‘비용’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컨베이어 벨트들 사이 사이에 ‘안전 통로’가 있어요. 제 키가 1미터 75센티미터인데도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야 해요. 자칫 머리가 부딪히면 몸이 휘청하더라고요. 바로 옆에서는 컨베이어 벨트가 쿵쿵 소리를 내면서 빠르게 돌아가요.

“난간이 있긴 한데 법적 기준은 1미터 20센티미터예요. 근데 워낙 바닥에 분진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분진을] 밟고 서면 안 그래도 낮은 난간 높이가 소용이 없어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키도 크잖아요. 옆에서 툭 치면 벨트 쪽으로 얼마든지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안전 통로’인가 싶어요. 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죠. 모든 게 다 돈이니까.”

비상 정지 장치인 폴코드 스위치는 고(故) 김용균 씨가 사망했던 태안 화력 현장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위급 상황에 폴코드 스위치가 쏠도 있으면 줄을 순간적으로 탁 당겨야 하는데, 회사는 줄이 팽팽하면 기계가 오작동할 수 있다면서 황당한 변명을 해요.”

노사합동 안전 점검 결과를 보면 조명등 중 절반에서 3분의 1가량이 아예 켜지지 않았고 사고 현장의 조도(밝기)는 30럭스에 불과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 제21조(통로의 조명)에 규정된 조도는 75럭스다.

이곳은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위험한 환경인데도 주변이 어둡고 분진이 많아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장소다.



“같은 공정에서만 벌써 세 번째 사망이에요. 2010년에는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위로 추락해 협착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위층 통로에서] 점검 작업을 하다가 아래 개구부가 열려 있는 걸 못 본 거죠. 현장에는 분진이 많아 앞이 잘 보이지 않는데 조명이 없었어요.”

김한성 부지회장이 얘기를 이어받았다.

“원래는 조명이 없었는데 다음 날 노동부에서 들어온다고 해서 회사 조명팀이 아침에 조명을 달더라고요. [그러나] 노동부가 조사 나왔을 때 이러는 거죠. ‘여기 밝는데 왜 빠졌냐고, 저는 당시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이었는데 정말 황당했어요.’”

소 잃고 외양간 짚썩 고치기

옆에 있던 정규직 노동자가 공감했다. 원료 검사 업무를 하는 그는 원료 이송 공장인 사고 현장을 자주 방문한다.

“안 그래도 어두운데, 시간이 흐르면 서 분진이 조명등에 들러붙어서 점점 더 어두워져요. 특히 석탄이 지나가면 시커먼 분진이 나면서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 허다하죠. 저희(정규직 노동자들)도 현장에서 카메라를 주기적으로 닦아야 한다고 요구해요. 안전과 직결되니까.”

비정규직지회의 통계에 따르면 2017~2018년 2년간 당진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는 총 137건 발생했다. 기계 끼임(협착)이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돌이 31건,

넘어짐이 29건, 추락 13건, 고온 접촉 10건 등이었다. 그러나 이 중 절반은 산재가 아니라 공상(회사 비용으로 보상하는 것) 처리됐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접적인 생산 라인을 담당하고 있어 위험 작업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비정규직은 산재를 당하면 평균 임금의 70퍼센트밖에 못 받아요(정규직은 100퍼센트). 안 그래도 정규직 대비 임금이 60퍼센트고 복리 후생도 없는데 말이예요.

“산재 신청을 한다고 다 쉽게 처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흔히 ‘골병’이라고 하는 근골격계 질환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재해는 산재 판정이 잘 안 나요.

“산재를 신청하고 인정받으면 뭐해요. 현실이 바뀌지 않는데. 산재 신청을 하고 하청 업체랑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를 꾸려 봤자 설비에 대한 권한을 가진 원청이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저희는 원하청 공동 산보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측은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꼴이 될까 봐 극구 거부하죠.”

사고 현장에는 3월 18일부터 천안노동지청의 특별근로감독이 진행되고 있다. 비정규직지회는 이번 특별근로감독도 요식 행위에 그칠까 우려한다.

당진 공장에는 이미 수차례의 특별근로감독과 수십 차례 정기·수시 감독이 이뤄진 바 있다. 2013년 아르곤 가스 누출 사고 직후에는 1123건의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이 적발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빛 좋은 개살구

상대적으로 빈도가 적긴 하지만 정규직 노동자들도 결코 중대재해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2007년 이래 사망한 노동자 5명 중 1명은 정규직 노동자였다.

특히 2017년 12월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28살 젊은 청년이었다. 이 노동자는 기계 점검 작업을 마무리하던 중, 아무도 작동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움직인 기계에 두 차례나 끼여 사망했다.

당시 현장 조사에 참여했던 김유정 변호사(민주노총 금속노조법률원 충남사무소)는 사고 원인이 기계 오작동이 원인이라면 다른 설비에서 언제 어떻게 재발할지 모를 심각한 문제다.

당시 노조는 같은 설비를 사용하는 전체 공장의 작업을 중지하고 원인을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천안노동지청은 제대로 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 없이 작업 중지를 해제해 버렸다. 노동부의 직접 작업중지 명령은 이전 정부에서 흔히 볼 수 없었던 일이긴 하지만, 각 노동지청들은 충분한 안전 실태 점검과 대책 마련 없이 급세 작업 중지를 해제해 버리기 일쑤였다.

2017년 12월 당진 공장에서도 이런 보여 주기식 작업중지가 반복됐던 것이다. 노동자들은 불안한 일터로 다시 발길을 옮겨야 했다. 안타깝게도 당시

좌파 지회장이 이끌고 있던 정규직노조 집행부도 이 문제로 터는 투쟁하지 않았다.

이윤 경쟁

현대제철은 1970년대부터 시장을 독점해 온 포스코에 비해 뒤늦게 뛰어 들었음에도 현대그룹 계열사라는 이점을 이용해 성장했다. 2011~2013년 당진 공장 일관제철소 건설과 2015년 현대하이스코 합병 등을 거치면서 덩치를 급속도로 키웠다. 그 치열한 이윤 경쟁 속에서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은 내팽개쳐진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도 2007년에서 2013년 사이에에만 10배 늘었다.

2012년 9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일관제철소 건설 현장에서는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한 달 간격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해 두 달 사이에 6명이 사망했다.

2013년 12월 정부가 당진 공장을 “안전 관리 위기 사업장”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특별관리감독 첫날부터 노동자가 추락사했다. 현대제철은 일간지에 대국민 사과를 실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고열 속에 용광로 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나 너무 힘들어” 한 마디를 남기고 쓰러져 사망했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철강 노동자들이 목숨 걸고 만든 기계가 노동자들을 잡아먹는 괴물이 돼 돌아온다. 공장은 어딘가 사람이 죽고 다쳐야 그 자리라도 쪼끔 개선이 된다. 이런 식이라면 그 드넓은 당진 공장에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회사가 입에 달고 사는 “안전 100년”이 올까?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는 노동자들의 소박한 바람을 진정으로 실현하려면 자본가들의 무한 이윤 경쟁에 따라 돌아가는 현 체제의 우선순위에 도전해야 한다.

철강 시장의 지분을 놓고 현대제철·포스코 등 국내의 자본가들이 끝없이 경쟁하는 한, 각 공장 노동자들의 생명이 마모되고 위험으로 내몰리는 일 또한 반복될 것이다.

더는 동료의 죽음에 익숙해 지고 싶지 않다는,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장시간·야간 노동에 휘청거리고 싶지 않다는 노동자들의 지극히 당연한 요구에 현대제철 사측과 문재인 정부는 즉각 응답해야 할 것이다.

웹사이트에서 기사 전문과 사고 현장 등 사진과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패 이후:
트럼프는 대북 강경파한테
끌려 다니고 있는가?
- ★ 하태경의 '워마드 폐쇄법'은
역겨운 백래시
- ★ 강사와 학생이 연대해 해고와
대학 교육 악화에 맞서자

인터뷰 | 최무영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

“수소차는 친환경 에너지 면에서 좋은 대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수소차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며 파격적인 지원책을 펴고 있다. 심지어 가스안전 규제를 완화해 도심이나 주거지에도 가스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있다. 수소차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에너지 위기를 해결할 친환경 대안이라는 것이다. 최무영 교수를 만나 수소차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들었다.

Q 문재인 정부의 수소차 예찬이 대단합니다. 일각에서는 수소차를 넘어 수소를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삼는 수소경제 얘기가 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전제해야 할 것은 제가 공학 전문가가 아니므로 세부적인 기술적 문제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물리학자 입장에서 원본적인 의견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수소를 에너지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에너지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에너지 저장매체 중 하나라고 보는 게 적절하죠. 수소가 자연상태에 많이 있으면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지만 자연상태에는 수소가 사실상 없거든요, 따라서 수소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그러려면 다른 물질에서 수소를 빼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상당히 써야 하므로 사실은 에너지를 수소에 잠시 저장했다가 빼서 쓴다고 봐야 하거든요.

수소를 얻는 방법이 대체로 두 가지 인데요,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탄화수소에서 수소를 뽑거나 물을 전기분해해서 얻게 됩니다. 천연가스에서 뽑는다면 천연가스가 에너지원인 거고요, 물은 거의 무제한에 가깝지만 전기를 써야 물에서 수소를 얻을 수 있으니, 결국 전기에너지를 쓰는 셈이지요. 이 경우에는 들어간 전기에너지만큼 쓰게 되니 에너지에 이득이 있지 않아요. 실제로는 전환 과정에서 도리어 에너지 손실이 상당히 있게 돼요. 요컨대 수소는 에너지원은 아닙니다.

Q 수소차가 친환경적이기는 한가요? 기존의 전기차와는 뭐가 다른가요?

휘발유나 경유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친환경적인 건 사실이지요. 오염물질 기체를 뽑지 않고 물만 배출하니까 친환경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소차를 전기차와 비교해서 더 친환경적인가 묻는다면 꼭 그렇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전기자동차도 아무것도 배출하지 않으니깐요. 경유차를 모두 없애고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꾼다고 하면 분명히 대기오염, 미세먼지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수소차도 사실 기본적으로는 전기차예요. ‘수소전기자동차’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지요. 수소를 이용하는 연료전지를 써서 전력을 만들고 그것으로 전동기(모터)를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연료전지 이후 과정은 전기차와 똑같아요. 전기차는 싣고 다니는 축전지에 전력을 저장해서 바로 이용하는 것이고 수소차는 수소를 갖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수소이온(양성자)과 전자를 분리해서 이동시켜서 전력을 만들어 이용하지요. 수소이온과 전자

는 산소를 만나서 물이 돼 배출됩니다. 결국 전동기를 돌려서 나가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둘 다 전기차죠.

문제는 효율면에서 보면 전기차가 월등히 낫다는 겁니다. 만약 전기분해로 수소를 얻는다면 그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전기를 쓰는 게 낫죠. 에너지 변환을 덜 할수록 손실이 적은 건데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에너지 변환을 더 해야 하므로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연료비도 전기차보다 수소차가 서너 배는 비쌀 거예요.

더욱 문제가 되는 게 충전시설이지요. 하나 짓는데 수십억 원이 들 텐데 주유소만큼 많이 지으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겠지요. 수소를 얻는 것도 쉽지 않고 저장소나 충전시설을 만드는 것도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에 반해서 전기자동차는 충전기 외에는 새로 시설을 지을 것도 없죠.

Q 수소차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텐데요.

수소차가 좋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충전 시간 문제인 듯해요. 전기자동차는 충전하는 데 한 시간, 빨라야 삼십 분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는 중간에 충전을 해야 하는 장거리 운행의 경우라면 시간 지연이 많이 집니다. 반면 수소차는 5분 이내지요. 장점은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장점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기술로 수소차를 한번 충전하면 600킬로미터 정도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한편 전기차는 그만큼 못 간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는 500킬로미터까지도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주행 거리에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죠. 특별히 장거리 운행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기차가 여러모로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전기차에는 축전지를 많이 실어야 하는데 축전지가 대체로 비싸서 전기자동차 가격은 대부분 축전지 가격이라고도 하지요. 그래도 전기차가 수소차보다는 싸요. 수소차는 전기차에 수소를 이용한 전력



“굳이 효율이 낮은 수소차를 늘리는 이유가 사실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닌지 의문입니다”

생산 장치가 덧붙여져야 하잖아요.

만일 수소 충전시설을 우리 나라 전국에 설치하면 우리 나라에서는 수소차가 어느 정도 팔리겠지요. 하지만 외국에는 팔기는 어려울 겁니다. 외국에는 충전시설이 없으니깐요. 현대자동차가 국내 시장만 생각하지는 않을 테니 수소차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Q 궁극적으로는 전기차가 대안이라고 보시나요? 전력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먼저 자동차 때문에 생기는 환경오염의 주범은 경유차예요. 한국은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싸거든요. 심지어 어처구니없게도 ‘클린디젤’이라고 경유차를 장려하기도 했지요. 경유값이 더 싼 경우는 해외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억제하는 편이지요. 이륜자동차(모터사이클)처럼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것들도 그냥 방치하죠.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모두 전기차로 바꾸는 게 적절하다고 봐요.

그러려면 전력이 필요한데 그걸 핵발전으로 충당한다면 여우 피하리라 호랑이 만나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짚짚하게 생각하는 건 수소차 정책이 핵발전 찬성론자들의 입맛에 맞으리라

는 점이에요. 수소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수소를 수입해 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석유나 천연가스 수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요. 뭔가 새롭게 하려면 물을 전기분해해서 얻어야 하는데 전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전력을 어디서 얻을 거냐? 핵발전을 해야 한다는 논리지요.

왜냐하면 핵발전은 핵반응로에 물을 한번 켜면 쉽게 끝 수가 없어요. 갑자기 끄면 체르노빌 사고처럼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요. 한 번 불을 붙이면 끝 수가 없으니 남은 전력을 해결해야 하고, 그래서 양수발전소라는 걸 만들었지요. 청평, 양양, 무주에 만들어 놓았는데 핵발전으로 남은 전력으로 괜히 물을 높은 곳으로 계속 퍼 올려 놓았다가 전력이 부족할 때 수력 발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는 한심한 일이에요. 상당한 비용을 들이고 무지막지게 환경을 파괴해서 만든 양수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정말 무시해도 될 만한 수준이에요. 따라서 양수발전소는 핵발전으로 남은 전력을 해결하기에 좋은 방안이 아닌 거죠. 대신에 남은 전력으로 수소를 만들어서 저장해 놓으면 딱 좋다고 할 수 있지요.

대안은 햇빛, 바람 같은 친환경 재생가능에너지로 가는 건데, 여기서 에너지 절약이 중요해요. 몇 년 전 통계를 보면 한국의 인구 1인당 사용 전력 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물론 압도적 1위는 미국이지만, 우리 나라가 2위권으로 유럽 평균보다 더 많을 정도지요. 그런데 가정에서 쓰는 전력량은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요. 산업용 전기를 엄청나게 쓰는 거예요. 산업용 전기요금 이 가정용보다 싼 데 이것도 정상이 아니죠. 가정용 전기는 많이 쓰면 누진제를 적용하는데 산업용은 오히려 깎아

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전력을 많이 쓰는 산업시설을 일본이나 중국에서 우리 나라로 들여온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는데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은 대폭 올려야 해요. 산업용 전기도 낭비가 심하죠. 어쨌든 절전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많아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바람과 함께 햇빛발전이 현재로서 가장 나은 대표적 방법이라 할 수 있지만 마구잡이로 산림을 파괴하고 햇빛전지판(패널)을 세우는 짓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점은 에너지 생산은 소비자에 최대한 가깝게 해야 한다고 봐요. 다시 말해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곳, 곧 도시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라는 거예요. 예컨대 건물 지붕, 벽, 창문 등을 전지판으로 덮으면 웬만큼 해결할 수 있거든요. 도로에도 깔 수 있고요, 내구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는지 모르겠지만요. 주차장 같은 데도 그렇고 자동차 지붕에도 설치할 수 있지요. 강이나 호수에 설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어요.

모든 전력을 재생가능에너지로 얻어 내는 것은 당장은 불가능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발상의 전환을 통해 에너지 중독에서 벗어나서 낭비를 줄이고 절약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고, 그것이 인류의 문명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에너지 문제에 미세먼지나 기후변화 문제가 모두 밀접하게 결부돼 있지요. 결론적으로 물리학자로서 제가 잘 모르는 기술적인 문제들이 많겠지만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적어도 원리적으로는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뷰·정리 장호중



1월 17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수소 경제 전시회



오랜 무노조 신화 깬 신도리코 노동자들

전주현

2018년 6월, 신도리코 노동자들은 회사의 59년 '무노조 경영 신화'를 깨고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신도리코 본사와 계열사의 제조·연구·판매·수리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단결해 사측의 부당한 처우에 맞서 싸우고 있다. 본사와 판매 계열사에 근무하는 약 900명 중 220여 명이 금속노조 신도리코 분회에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신도리코는 프린터·복합기 소모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한국에서 줄곧 복사기기 업계 1위를 차지해 왔다. 신도리코 회장 우석형은 "직원을 가족처럼 대하는 경영 방침"을 자화자찬하며 노사분규 하나 없는 것을 자랑으로 삼아 왔다. 그러나 신도리코는 오랜 세월 노동자들의 고향을 뽑아 어마어마한 수익을 챙겨 왔다. 회사 현금 자산이 약 6500억 원에 달한다.

신도리코 노동자들은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당 전환배치 금지, 차량 유지비 지원, 노동조합 인정 등을 요구하며 수개월 동안 회사와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사측은 알맹이 없는 교섭으로 시간만 질질 끌며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3월 18일, 신도리코 조합원들은 성수동 회사 본사 앞에서 "신도리코 단체협약 체결! 노조탄압 중단! 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 1월 31일 첫 경고 파업에 이어 두 번째 하루파업이었다.

제조·연구·판매 수리 업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전국에서 모여 처음으로 함께 파업 집회를 열었다. 조합원 150명과 연대 단체 50여 명이 참가해, 신도리코 사측과 회장 우석형을 강력 규탄하고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했다.

장시간 '공짜 노동'

신도리코는 오랜 세월 법도 무시하며 장시간 '공짜 노동'을 뽐냈게 강요해 왔다.

강성우 분회장은 이렇게 성토했다. "신도리코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연봉도 좋고 건실한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2014년에 입사했는데 계속 주 70시간 이상 근무했어요. 야근 수당요? 그런 거 모르고 죽도록 일만 했습니다."

한규훈 부분회장도 끔찍한 장시간 노동 현실을 고백했다.

"저는 연구직종에서 일하는데, 3년 동안 주 100시간을 일한 적도 있어요.



신도리코 노동자들이 단결을 결의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시간 단호한 단결 투쟁으로 단체협약 체결하고 승리의 봄을 맞이하자

'아직 일 못 끝냈으면 마저 일하고 가야지'라는 [상급자의] 말 한마디면 다들 눈치보고 밤 12시까지 일한 적이 허다합니다. 이해가 안 되겠지만, 회사는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 우리를 무시했어요."

11년을 근무한 한 조합원도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 3개월 연속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했어요. 3개월에 3~4번 쉬어봤나? 최근 못 받은 수당을 3년치 정리해서 노조 임금 체불 소송에 참여했는데 제 것만 5000만 원이나 돼요. 억울하고 답답해서 노조에 가입했어요."

신도리코 분회는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3년치 수당을 일부 정리해 11억 원의 임금 체불 소송을 걸어 놓은 상태다.

설치 및 수리 기사 노동자들도 장시간 '공짜 노동'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저는 전남, 제주 지역을 맡고 있는데 교통이 불편한 지방에서는 한 두건 일을 처리하면 하루가 다 지나가요. 하루 종일 외근 갔다가 사무실 와서 업무 처리하면 연장 근무는 기본이예요.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해서 저녁 9시 넘어 일이 끝날 때가 많았지만 수당은 없었어요. 저녁 시간에 친구를 만나거나 운동하는 것은 꿈도 못 꾸죠."

밥 먹듯 야근했던 노동자들은 수당을 받은 적이 거의 없었다. 노조가 수당 없는 야근 문제를 제기하자 사측은 '강요한 적 없다', '알아서 야근 한 것이다', '출퇴근 시간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다'며 가당찮은 궤변을 늘어냈다. 불법적인 '공짜 노동' 문제가 불거지자 사측은 울

며 겨자 먹기로 야근을 임시 중단했다.

그러나 이후에 사측은 취업규칙의 탄력근로 허용 조항을 근거로 내밀며 야근 강요를 시도했다. 그러나 그 조항에 따르면 탄력근로는 딱 2주 동안 주 8시간만 연장 근무가 가능하다. 오히려 그동안 장시간 '공짜 노동'을 강요한 사측의 위선만 탄로난 셈이다.

부당 전환 배치와 노동자 쥐어짜기

아산 제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구조조정 압박을 받고 있어 불만이 매우 크다. 그래서 아산 공장 조합원 50여 명 전원이 2차 파업에 참여했다.

아산 공장에서 근무하는 방인식 부분회장은 사측의 행태를 폭로했다.

"현재 아산 공장에는 130여 명이 남아 있어요. 회사는 중국과 베트남에 제조 공장을 짓고 난 후 부당 전환 배치를 시키는 방식으로 퇴사를 압박했어요. 야근야근 구조조정을 하는 거죠. 현재 20여 명은 아산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시키는데 교통비를 주지 않아요. 일부 노동자들은 부산에 있는 판매 지사로 6개월씩 전환 배치를 시켰는데 숙소 제공도 안 해 줘요. 자비로 월세를 부담해야 돼요. 못 견디면 나가라는 겁니다."

아산 공장의 열악한 작업 환경도 심각하다.

"공장에서 토너를 만들고 있는데 분진이 너무 심해요. 공기 중에 토너가 루가 묻쳐 떠다녀요. 자판기에 토너가 루가 끼서 안 눌러지기도 해요. [토너]

분진을 피하며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돈이 든다는 이유로 회사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신도리코는 비용 절감을 위해 악랄하게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쥐어짜다. 지방에서 설치·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한 노동자는 울분을 토하며 이렇게 말했다.

"[회사에서] 일하려면 차가 필요하다고 구매를 강요해요. 어처구니없지만 빚내서 차를 사야 해요. 그런데 회사는 기름값, 통행료, 주차비만 주고 한 푼도 지원 안 해 줘요. 보험료, 엔진오일 등 몽땅 자비로 부담해요. 회사 완전 쓰레기 아닙니까?"

김준한 부분회장은 차량 비용을 전가하는 사측을 꼬집었다.

"노조가 생기고 나서 불만을 진정시키기 위해 5만 원을 지원했어요. 근데 원래 하려던 거라고 해요. 장난 합니까? 월급이 겨우 최저임금 조금 넘는 수준인데, 보험료만 1년에 250만 원 나가요. 1년에 차량 최소 4만~5만 km 이상 타니깐 고장이 잘 나거든요. 수리비와 차량 유지비 빼면 남는 게 없고 월급이 줄줄 새 나가요. 차량 지원이 있는 대리점의 파트너 직원보다 나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차량 지원비를 꼭 파내야 합니다!"

단결 투쟁

노동자들이 행동에 나서자 사측은 가장 문제가 된 야근을 중단하고, 노조 눈치를 보며 부당 전환 배치도 잠시 보류했다. 또한 출장 지원비를 일부 인상

하고 쥐꼬리만 한 차량 지원비를 지급했다.

조합원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낸 변화에 자부심을 느꼈다. 또한 노동조합을 만든 이후 기류가 달라졌다고 입을 모은다.

"노동조합 생기고 나서 함부로 야근하라는 말을 못 합니다. 이제는 퇴근 시간에 맞춰 딱딱 나갑니다."

그러나 사측의 쪼금 개선은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개선 염원에 턱없이 부족하다. 장시간 '공짜 노동'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하고, 온갖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투쟁을 전진시켜야 한다.

현재 사측은 노동자들의 요구가 너무 많으며 단체협약 체결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또한 눈엣가시처럼 여긴 강성우 분회장을 징계로 협박하며 노조 탄압에 시동을 걸고 있다.

강성우 분회장은 사측의 기만적인 꼼수를 경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회사는 뒤로는 요구를 일부 들어주는 척하지만, 표면적인 제스처일 뿐입니다. 우리 요구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우리 투쟁이 흐지부지되면 회사는 뒤통수 치며 공격할 수도 있어요. 서로 다른 업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단결해야 합니다."

신도리코 분회는 사측이 단체협약 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3월 26일 3차 파업을 감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조합 보장을 요구하는 신도리코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연대를 보내자.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름 _____

이메일 _____

소속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종교동교회 : ☐ 기타) _____

[선택] 휴대전화번호 _____

회비약정액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_____

☐ 5만 원 : ☐ 기타 (_____)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서명)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노동자 연대〉 기사를 빠짐없이 보는 방법

- ★ 안드로이드 앱 플레이스토어에서 "노동자 연대 알리미"로 검색
- ★ 페이스북 "노동자 연대"로 검색 ("신문"을 팔로우하셔야 합니다)
- ★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로 검색, 선택 후 Start 버튼
- ★ 트위터 @wspaper

